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제도 실효성 높이는데 주력

6개월간 조례 66건 제·개정, 42건 건의안 채택

‘신’뢰받는 의회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대외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았다. 특히 12대 의회 출범 직후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공공의대 설립, 균형발전, 탄소중립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촉구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발연구회 등 7개의 의원연구단체도 결성했다. 6개월 동안 의원발의로 조례 66건을 제·개정했으며, 42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로 12대 의회 활동을 정리해본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박정희·서난이·양해석·오현숙·윤정훈·이명연·임승식·최형열 의원)는 새로 구성된 12대 도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회와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마련에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체결했다.

3년만에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열고, 자치분권과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의원과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갑질예방 교육은 올해 시행된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특별위원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전북 현안사업 해결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올해 처음 전북도 정부수석과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정부수석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촘촘한 심사에도 힘썼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김성수·김정수·박정규·송승운·염영선·오현숙 의원)는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전북도청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인사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진단했다. 위원들은 자율융합제의 실효성 여부를 따졌으며, 개방형 및 산하기관장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등도 주문했다.

위원들은 전북발전전략과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일몰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1시군 1농산물기업 육성 등 농업관련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과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캠프버리 성공개회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할 것을 전북도에 당부했다.

전북지역 섬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섬 발전 지원조례'와 '민중화운동 관련자 예우조례',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조례',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 계층의 도민 지원 방안도 강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김만기·박용근·윤정훈·황영석)는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청 유아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과 성명서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또 김영병 전담의료원인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농촌지역 보건 의료실태를 살폈다.

도민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도 펼쳤다. 한의(韓醫) 분야를 차세대 예방사업에 포함시키는 '전북형 차세대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가정의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부산물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등도 제정했다.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한 영농도우미사업 예산증액과 어린이통학버스에 지역아동센터 인력 상시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비리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안 해결에도 주력했다.

의회 내부 시스템 마련 노력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에 힘 써

농업·농촌 발전 제도 마련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 기울여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서난이·오은미 의원)는 쌀값 하락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쌀값 하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발의하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 기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으며,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에 기업 육성성과 주력산업을 견인할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국가산단 지정 노력을 요구했다.

기업, 농업법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해 의정활동의 깊이를 더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양해석, 김정기·문승우·이명연·이수진·윤수봉·윤영숙 의원)는 청년과 예술인, 농어민 등의 당면과제를 살피면서, 전북 발전전략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층에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등



▶ 국주영은 의장의 소회

도민 신뢰 높이는데 노력

"12대 의회 출범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우 의욕적으로 활동해주신 덕분입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12대 의회 출범 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전북도와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후 청문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

"인선과정 투명성 확보
도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서
유아교육 예산 조정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왕성"



원 예산을 조정해 교육환경의 차별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왕성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전북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의원과 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환경복지·기업유치·문화관광산업·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탐구하고,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변화로 꼽았다.

▶ 사진으로 보는 상임위 의정활동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 새만금제버리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환경복지위원회 - 전북도교육청 유아무상교육 재검토 촉구



농산업경제위원회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방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민성지구 공공주택 건설현장 방문



교육위원회 - 군산교육문화회관 현장의정활동

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농어민 최소생계유지와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불거진 청문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항공편 축소가 이뤄진 군산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솔지·이정린·장연국·전용태·진형석·한정수 의원)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심사했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론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안전법 개정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주문했다.

교육위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을 살피기 위해 남원제일고교와 한국치즈과학고, 군산기계공고 등을 방문했으며, 리모델링이 완료된 군산교육문화회관을 찾아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